

[오피니언]

월/요/광/장

손용엽



서울의 부동산값이 요동치는 몇 해 동안 광주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동산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서울은 생활권 밖이었고, 강남의 집값이 오를 때 한들 배가 이를 만큼 개인 정서가 베어난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광주에서 키우던 자식을 서울로 보내고 부터는 서울의 부동산값 인상 소식에 자신 앞에 죄인과 같은 심정이 날로 커진다. 서울 진출의 경제적 장벽 앞에 대를 이어서 나약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니...

참여정부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특정 지역을 버블세븐 지역으로 정조준하여, 주택거래가격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게 하고 다주택 소유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높이는 소위 수요억제정책을 여러 차례 발표하였다.

하지만, 버블세븐 지역의 주택가격은 끊임없이 큰 폭으로 올랐고, 급기야 주택 가격 상승 기세는 버블세븐 지역에서 수도권 전 지역으로 번지고 고급아파트에서 서민용 아파트로 확산됐다. 이 폭풍에 참

여정부 부동산정책 담당자들이 물러나고 정부는 공급확대 부동산정책에 눈을 돌렸다.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광주에 사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차

에 물려 있는 현상을 고착화시킴으로써 지역 불균형발전을 더욱 확실하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토지의 흥질을 바꾸고 주택 충수를 높이는 행위는 불가역적인 투자를 수반한다. 장래에 어떤 이유로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완화되고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 해도 신도시를 원상태로 돌리는 것은 어렵고 빠른 도심을 좌석하게 만드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다.

인구가 떠난 농촌의 활황한 모습을 자주 봄은 광주와 전남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이해할

을지 모른다. 조그마한 봄급에 의지하여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가까운 장래에 가족의 서울 진출을 포기하거나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산들을 처분해야 한다. 그 결과 지방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가치는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은 뻔한 이치다.

장기적으로 수도권의 부동산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길은 지방의 경제환경을 개선하는 과감한 정책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다. 주택 공급 확대는 신규 건설과 기존 주택의 거래 활성화로 달성을 가능하다.

수요측면에서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상승은 시장에 돈이 많아 유통되고 있는 유동성이 따른 현상이다. 1970년대 후반과 올림픽 이후, 그리고 2002년부터 시작된 주택가격상승은 국제수지 흑자로부터 비롯된 풍부한 유동성과 관련이 있다.

이자율만을 대상으로 하는 통화정책의 기준에 통화량을 추가하여 보다 밀접하게 유동성을 관리하는 정책이 부동산 가격인상 추세를 완화시키는데 더 기여할 것이다.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한도와 규제는 돈 없는 서민과 수도권 진입장벽에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만 곤란하게 만들 뿐이다.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방에서 본 정부 부동산 정책

신도 모르게 수도권 주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이해한다는 점이다. 인구와 물자의 이동이 활발한 이 시대에 서울과 지방을 별개로 보는 것이 이상할 수 있으나, 이번 정부의 주택공급확대정책에 대해 광주와 전남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한다.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용적률을

높여 서울도심의 다가구주택을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급확대정책은 장기적으로 수도권의 주택공급불량을 늘리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 인구의 50% 가까이가 수도권

수 있다.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나타나는 주택수요 증가 추세를 꺾기 위해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의 상한을 낮추고 개인별 대출총량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것도 문제는 아닐 수 없다.

광주와 전남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금을 그만큼 많이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의 진입장벽은 그만큼 높아진 셈이다. 지방에 사는 부자들에게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

시 설

위기의 서민경제 이대로 내버려 둘 건가

서민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금융권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개인파산신청자는 8만3천4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3천708명의 3.6배에 달하고 올 연말까지는 11만~12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가구 중 소득 하위 30%의 올해 3·4분기 적자가 비율은 51.9%로 작년 같은 기간의 50.7%보다 1.2%포인트나 늘었다. 위기의 서민경제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들이다.

서민경제가 과산 직전으로 내몰린 근본적인 이유는 경기 부진으로 소득과 일자리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10월까지 늘어난 일자리는 월 평균 29만8천 개로 전부가 하향 조정한 목표치 35만 개에도 5만 개나 부족한 실정이다. 일자리가 없으나 소득이 낮아지고 이는 다시 소비 부진과 경기 하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경제적 보호막이 취약한 서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 실제로 실업과 개인파산의 증가로 서민경제는 이미 파탄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하는 전문가도 많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중산층이 서민층으로 추락했는데, 이번에는 서민층이 빈민층으로 전락하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서민경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무너지고 있는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는 얘기다. 서민 경제가 살아나야 심리치료나 체감온도가 올라가고 실물경기도 살아나게 된다.

지금은 기업투자 활성화로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기업, 노동계 모두 합심해야 할 때다. 서민경제가 파탄하면 국가 경제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전국 최하위 재정자립도 언제까지…

광주·전남의 재정자립도가 올해도 여전히 막바닥 수준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19.9%에서 20.2%로 조금 올랐으나 전국 최하위에 그쳤고 광주시도 지난해 60.6%에서 57.5%로 떨어졌다. 광주시는 6대 광역시중 가장 낮았고 전남은 전북 23.9%, 강원 26.7%, 충북 31.5%에도 못미쳤다.

기초단체는 보다 심각하다. 광양시가 전남에서 가장 높았지만 48.7%에 그쳤고 함평, 광성, 고흥, 강릉, 진안 등은 10%를 밟았다. 특히 나주시를 포함해 보성, 무안 등 11개 시·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광주지역 기초단체도 별반 달라질 것이다.

재정의 자립 없이는 건전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중앙정부의 보조금 등에 의존해온 중앙의 간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예산과 인사는 중앙정부가 지방을 통제하는 주요 정책수단이다.

자치단체가 만성적 재정적자를 끌어안고 정부만 쳐다보아서는 안 된다. 민선 단체장 이후 재정자립도가 더 떨어졌다는 것은 방만한 재정운용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자치단체들은 '예산타령'만 할 게 아니라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각종 축제와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 등은 지방의 재정난을 악화하는 주요 요인이다. 자치단체들은 이러한 낭비적 요소를 과감히 없애고 기업유치를 통한 세원 확보 및 세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과제는 '자주재원의 확보'가 되어야 한다.

정부도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기업의 지방이전 등 기존의 요구를 넘어 보다 근본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방의 기본 성장동력인 인구와 '돈'의 균형없는 지방자치는 허구에 불과하다. 정부는 인구가 늘어나고 '돈'이 돌아가는 자치단체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테오 반 고흐는 비운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증손자이자 네덜란드 영화 감독이다. 그는 지난 2004년 11월 2일 암스테르담 광장 한 복판에서 모로코계 과격 이슬람교도 무하마드 부바리에 의해 총과 칼로 살해됐다.

반 고흐 감독은 이슬람 사회에 대해 거칠고 막강한 비판을 해온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살해되기 전 이슬람의 여성 차별에 대한 TV 영화

'굴증'을 제작, 이슬람 과격세력의 살해 표적이 됐다. 이후 네덜란드는 반 이슬람 기류에 빠졌다. 관용은 사라졌고 증오가 팽배했다.

반 고흐 감독은 이슬람운동은 이슬람 문명 중에서도 여성의 배일 착용에 집중됐다.

유럽 국가의 이런 조치는 이슬람 문명의 상징을 야만으로 치부해 버리는 데 있다. 코시안(한국 남성과 동남아시아 여성간의 자녀)이 급증함에 따라 인종과 문명의 다양성에 대한 관용을 요구 받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도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팽배한 반 이슬람

정서에 힘입어 지난 17일 공공장소에서 이슬람 여성의 베일(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법을 승인했다. 이슬람 전통의 상인 부르카가 '공공의 질서와 안전을 어지럽힌다'는 이유에서다.

유럽의 반 이슬람 기류는 네덜란드뿐

이 아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004년 스카프 형태의 베일인 히잡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대법원은 지난 3월 얼굴과 손만

내놓고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 전통의

질법을 학교에서 금지한 조치를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0월 엔초대학교의 보조교

사인 한 이슬람 여성 이 히잡을 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정직 처분을 당했다.

유럽 국가의 이런 조치는 이슬람 문명의 상징을 야만으로 치부해 버리는 데 있다. 코시안(한국 남성과 동남아시아 여성간의 자녀)이 급증함에 따라 인종과 문명의 다양성에 대한 관용을 요구 받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도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오주승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기 고

김 광 혜



2007년도 노사관계는 올해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동계와 사용자단체 그리고 정부는 내년 대통령선거와 비관적인 경기전망 등으로 노사관계가 부정적인 환경에 놓일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노조가 산업별로 통합되고 비정규직 관련 법안 등 새 제도가 정착되면 노사분규가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지역도 되풀이 되고있는 노사분

출합으로서 노사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또한 여전NCC를 비롯하여 여전농협 등 노사가 합의를 이루어낸으로서 여수산단은 물론 우리지역이 과업없는 무분규지역으로서의 위상을 전국에 드높였다.

이는 결국 3여동합을 실현한 30만 시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과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노사문화를 창출한 결과로서 지역경제 발전과 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

기업하기 좋은 여수, 상생의 노사문화 만들자

규로 인해 많은 인·물적 피해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다행히 올해는 노사간 양보와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함으로서 내년의 노사문화가 한층 성숙될 것으로 기대가 크게 사설이다.

일례로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과업은 전국민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장기간 계속된 포항건설노조의 시위로 인하여 포항지역 경제가 침체된다며 기업인과 상인들이 힘들고 나섰다.

포항지역 시민과 128개 기관·단체 25,000명은 불법시위 규탄 및 포항경제 살리기 범시민궐기대회'를 갖는 등 포항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였다.

그러나 우리지역의 경우, 건설노조와 여수산단 플랜트건설협의회·계전협의회는 수차례의 대화를 통해 합의를

계된 의미있는 한해가 됐다. 또 여수상의에서는 지난 4월부터 여수시를 비롯한 30여개 경제·노동계·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여수기업 사랑협의회'를 중심으로 범시민 기업 사랑운동 및 기업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불식시키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동안 '기업이 여수의 미래'라는 생각을 가지고 30만 시민 모두가 하나되어 '기업하기 좋은 여수'를 만들어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여수의 노사문화가 꽂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기업 사랑운동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 〈여수 상공회의소 회장〉

특하면 약속위반 소비자 우롱하는 인터넷 쇼핑

인터넷 쇼핑으로 인해 파는 쪽이나 사는 쪽이나 편리하고 좋아졌다. 하지만 물건을 사는 곳과 파는 곳이 다르고 컴퓨터 화면에 나오는 그림만 보고 골라야 하는 점 등은 단점으로 꼽힌다.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는데 얼마 전 모 인터넷 쇼핑몰에서 디자인 관련 외국 전문서적을 1권 구입했다. 주문 당시 인터넷 뱅킹을 통해 입금하고 책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는데, 1주일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고 책도 도착하지 않았다.

먼저 주문한 소비자를 우선으로 여겨야 하는 것 아닌가. 이같은 행위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박미진·광주시 동구 운림동

나 재입고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같은 학과 다른 친구는 내가 주문한 다음날 주문하고 도 3일 뒤에 받았다고 했다.

그 친구는 다른 학우들과 함께 통째로 11권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1권 주문은 나중에 배송해주고 나중에 주문한 것이라도 주문 물량이 많은 것은 즉시 배송해줬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내게 책이 오지 않은 이유를 알고 나니 너무 화가 났다.

먼저 주문한 소비자를 우선으로 여겨야 하는 것 아닌가. 이같은 행위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내가 주문한 책이 품절돼 10일 후에

법률

회장 許宰皓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기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511>

편집 부 2200-629 문화